



주권자가 '퇴진'의 기준을 제시한다!

**“질서 있는 퇴진”, 탄핵...
꼼수 퇴진에 휘말리지 않을 다섯 가지 기준**

- ① 박근혜 구속해야 퇴진이다!
- ② 새누리 퇴출해야 퇴진이다!
- ③ 삼성 이재용 처벌해야 퇴진이다!
- ④ 정치검찰 해체해야 퇴진이다!
- ⑤ 박근혜 정책 폐기해야 퇴진이다!

보수세력에게 박근혜는 버리는 카드

국회 탄핵이 순식간에 어그러진 것은 박근혜가 국회에 던진 질문 탓이다. 3차 담화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언제 어떻게 대선을 하면 당신에게 유리한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던진 박근혜 퇴진 방법과 시기에 관한 질문은 박근혜가 던진 새로운 질문 앞에 무력해졌다. 이미 현실에서 박근혜는 죽은 권력이다. 중요한 건 미래의 권력이다. 문재인을 꺾을 연합을 준비하는 새누리 비박과 국민의당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거국내각이나 개헌처럼 둘을 연결시켜줄 촉매도 필요하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담화에 미리 답을 내놨다. “대선은 6월쯤. 거국총리 세우고, 개헌하면 새로운 보수연합으로 집권 가능.” 대통령 퇴진은 대선 일정에 맞춰 역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퇴진은 “4월”이다.

잘 보면, 지금 보수세력에게 박근혜는 버리는 카드다. 심지어 친박까지도 박근혜를 “잘” 버려 자신들에게 유리

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 한다. 박근혜 스스로도 대통령직을 잘 버려 구속을 면해보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 퇴진은 저들에게 동쪽에서 북을 울리며 서쪽으로 진격하는 손자병법의 성동격서 전략이다.

사실 이런 정치공학은 퇴진의 방법과 시기를 사태의 중심에 두는 순간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보편타당한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닌 만큼 “즉각 자진 퇴진”, “거국 내각 후 자진 퇴진”, “즉각 탄핵”, “총리 선출 후 탄핵” 등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나뉜다. 그리고 이 세력들을 규합하려면 결국 이해관계를 맞춰야 한다.

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언제 어떻게 퇴진해야 하는가?”라는 국회의 질문도, “언제 어떻게 대선을 하면 당신에게 유리한가?”라는 박근혜의 질문도, 국민에게는 답이 있을 수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 이 퇴진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답을 찾고자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질문에 청와대와 국회가 대답하라

이제 청와대와 국회의 질문에 국민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질문에 청와대와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첫째,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는가? 퇴진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이 문제다. 4월 퇴진론은 암묵적으로 박근혜를 사면시켜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야당 대선후보마저 사면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존속시킬 뿐이다.

둘째, 부역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가? 비박도 부역자다.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를 세웠다. 탄핵을 좌지우지할 처지가 아니다. 친박과 비박이 한 목소리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 보라. 이들은 뭘 해도 결국 도로 새누리당이다.

셋째, 재벌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국민 위에 수출재벌이 있다. 그런데 국민이 없으면 수출재벌도 필요 없다.

2008년 삼성 특검 때도 이건희가 경제를 핑계로 구속을 면했다. 이건희-이

재용 가족은 상습적 헌법 유린범이다.

넷째, 정치 검찰을 해체할 수 있는가? 특검은 김기춘, 우병우를 구속하고, 정윤희 문건 은폐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검이 최재경 민정수석과 적당히 수사를 조율해 검찰 권력만 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은 바로 검찰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다.

다섯째, 박근혜 정책을 모두 폐기할 수 있는가? 재벌특별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성과연봉제와 노동시장구조개혁 정책,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보호협정 같은 평화위협 정책 모두 즉각 폐기해야 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에 대해서는 “박근혜 즉각 퇴진, 범죄자 박근혜 구속”이라는 단호한 구호면 족하다. 촛불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에 관심을 집중할수록, 박근혜 체제의 문제를 잊게 될수록, 저들의 답 없는 질문이 우리를 혼란케 할 것이다.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제 정말 박근혜와 새누리의 정치공작을 떨어버리고,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 체제를 해체시켜야 한다. ●

이 와중에 재벌특별법 추진하나 같은 주술에 두 번 속지 않는다

위기가 다가오니 재벌 족쇄 풀라?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보수언론과 경제 관료들이 일치 단결하고 있다. “환란이 다가오니 재벌 족쇄를 풀라.” 박근혜가 끝없이 반복했던 주문을 또다시 외우고 있다.

경제위기는 맞다. 생산, 수출, 소비 등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며,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도 불안하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는 해법이 아니다. 민생 파탄의 원인이 바로 재벌이고, 그 재벌을 살리는 경제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파탄 낸 박근혜 체제의 공범들이 다시 해결사가 되어 등장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선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도박하는
규제프리존법

이 와중에 국회는 재벌특별법인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이야말로 재벌청탁 수사 대상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재벌들이 총 774억 원을 입금한 다음 날 박근혜는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이를 총괄하는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박근혜-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으로 임명되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지역별로 관련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명시적인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세월호 참사, 가슴기 살균제 사고를 만드는 법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을 민주당마저 동조하려고 한다.

재벌에게는 특혜가 아닌
처벌이 필요하다

재벌 청문회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는 쇼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재벌에게는 직접적으로 선물을 주려하는가? 재벌특별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재벌에게는 특혜가 아닌 처벌이 필요하다. ●

12.6 재벌총수 청문회, 삼성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따져 물어야 이재용 처벌해야 삼성이 지배하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12월 6일 국회는 재벌 총수들을 불러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한다. 가장 뜨거운 증인은 삼성 이재용이다.

그런데 의원들이 삼성에 최순실 ‘의혹’만 물어서는 안 된다. 삼성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가장 오랫동안 헌정을 주기적으로 유린했기 때문이다. 삼성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따져 묻는 청문회여야 한다.

과거 - 1997년 대선개입,

2002년 차떼기, 2007년 삼성특검

2007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삼성 특검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에서 비롯되었다. 이재용은 금융사기와 내부거래를 통해 그야말로 날로 지분을 인수했다.

97년 대선개입은 삼성이 내놓고 헌정을 유린했던 사건이었다. 이학수 삼성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

2002년 대선에서도 삼성은 이회창 후보에게 수백 억 원의 정치자금을 트럭에 실어 제공하다 적발되었다.

현재 - 국민연금 농단과 의료민영화

삼성에는 2015년 초 최순실의 딸까지 챙기며 대통령에 다리를 놓아 달라 매달렸다. 그해 7월에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했고,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을 위해 주춤에서 합병에 찬성했다. 최종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렇다. 이재용은 8조 원 이득, 국민은 6천억 원을 손해, 최순실은 35억 원 수입.

‘이재용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에 의료민영화는 또 하나의 필수요소다. 헬스케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성이 하겠다는 헬스케어가 의료민영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 연이어 발표한 각종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은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맞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미래 - 삼성이 지배하는 헬조선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삼성

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전 합병도 따지고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대주주가 또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 8.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액수로는 시가 20조원이 넘는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지주를 다시 이재용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와 합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면 국민연금은 삼성이 정권 실세에게 돈 몇 푼 찢러주면 이재용을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은 보험회사로 보험가입자가 낸 돈이 자산이다. 이재용이 이견회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고 동시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자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 넷 중 하나는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다.

삼성연의 국정농단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재용을 반드시 처벌하자. ●

* 앞선 세 차례 유인물(12월 19일, 26일 촛불)에서 삼성의 상습적 헌정 유린 역사를 살펴봤다. 앞선 글들은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www.pssp.org)’에서 볼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박근혜 체제를 바꾸기 위한 특별 페이지입니다. 비선의 비선,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헤치는 글이 올라옵니다. 보수 언론의 주요 기사와 사실에 관한 논평을 매일 발행합니다.



www.pssp.org

사회진보연대

검색